10.15686/fkl.2026..68.162

1980년대 말 ‘여성 언론’의 형성과 성 지식의 매개

-『여성신문』 지면 분석을 중심으로

임진하
서울대학교 강사

목차

1 서론
2 민생치안 의제와 ‘보호받을 가치’의 조정
3 향락문화 추방의 움직임과 규제의 난점
4 새로운 성 지식의 매개
5 결론

이 글은 여성신문사의 연구 지원을 받은 여성신문 연구팀(김정은, 윤조원, 임진하, 정고은, 정혜진)에서 『여성신문』을 함께 읽고 공부한 결과물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언론·출판 자유화 이후 '여성 언론'의 형성 과정을 『여성신문』의 성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여성신문』은 대표적인 여성주의 매체의 하나로서 의의가 인정되지만, 자체의 노선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본고는 여성운동 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담론을 교차시키고 매개한 공간으로서 『여성신문』의 매체 특성을 재규정했다. 아울러 『여성신문』의 담론이 사회적 쟁점에 대응하며 구성되고 조정되어갔다는 점을 짚고, 1980년대 말 공론장의 상황 속에서 '여성 언론'의 기획이 지닌 의미를 살폈다.

1980년대 말 『여성신문』은 성폭력과 인신매매 등을 민생치안의 의제로 묶고, 이를 통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성'을 판단하는 규범을 비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한편으로 각종 성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향락문화를 추방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건전한' 성 윤리를 규범화하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이때 추방의 대상이 된 출판물 등이 성 지식으로 유통되는 상황이 문제로 부상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성 담론의 생산과 유통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 같은 공론장의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성 담론을 지식의 형태로 매개한 공간으로서 『여성신문』의 역할을 밝히고, 1980년대 말 공론장에서 『여성신문』이 묶어낼 수 있었던 담론의 폭과 한계를 짚었다.

국문핵심어: 여성신문, 여성 언론, 성 담론, 성 지식, 성교육

1 서론

1988년 10월 『여성신문』이 '여성 언론'의 이름을 내걸며 출발했다. 기존 언론의 인적 구성과 기사 보도 시각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바탕에 있었다.[1] 여성에게 할당된 '여성란'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취미와 교양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여성

1 1989년 1월 기준 한국의 일간신문사상 편집국 여기자 비율이 유례없이 높았던 『한겨레』의 경우도 그 비율이 16%에 그쳤다.(김선주, 「어떤 여기자의 망년회」, 『한겨레』, 1989. 1. 6.)

의 삶에서 중요한 사안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2]이 『여성신문』의 창간에 힘을 모으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취재원, 정보원, 기자 등을 불문하고 여성은 소수였고, 대체로 중요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영역에 배치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말할 위치"에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했다고 유선영은 지적한다.[3] 뉴스 생산자의 위치로 가는 여성들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언론사 구조상 기존의 취재 관행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4]

이 같은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발한 『여성신문』은 언론 자유화 이후 공론장의 확대에 기여한 대안언론의 하나로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5] 1988년 『한겨레』가 국민주 신문으로 출발하며 자본과 정치권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 대안언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게 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신문』 또한 국민 주주를 모집하며 창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6]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넘은 "범여성적"[7]인 신문을 목표로 삼았던 『여성신문』은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한국 여성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실천적 주장을 수행하고 서로의 연대의식을 고양"하며 "여성의 잠재능력이 정치 역량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여론을 주도"하는 것을 편집원칙의 하나로 천명했다.[8] 실제로 『여성신

---

2 「여성신문 소식」 1호, 여성신문사, 1988. 8., 2쪽.

3 유선영, 『여성과 언론: 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중앙일간지와 〈여성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2002, 44쪽.

4 김명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1, 430쪽. 이는 뉴스 생산물이 미디어 조직의 프레임에 의해 구성되며, 언론인 개인의 태도나 신념은 조직의 목표와 문화 내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데서 비롯한다. 여성 언론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2000년대 초에도 여전히 언론사 임원급에서 여성의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한국언론재단의 설문에 응한 과반수의 여성 기자들이 언론사의 보수적 관행과 성차별을 느낀다고 보고했다.(유선영, 앞의 글, 225-226쪽.)

5 김은규,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과 추동 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3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6 황금희, 「여성주의 매체의 정치학과 딜레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3, 31-32쪽.

7 「여성신문 소식」 1호, 앞의 글, 1쪽.

문』은 다양한 여성운동 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폭넓게 담았고, 이는 『여성신문』의 한계로 짚어지기도 했다.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매체로서 의의가 인정되지만, 자체의 논조나 정치적 입장이 불명확해 보인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다.[9] 이는 다양한 여성운동 및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의 주장을 '여성'의 '여론'으로 모아내고 정치적인 힘으로 이어내는 데 『여성신문』의 지향이 있었던 결과이다. 즉 『여성신문』은 공론장에서 '여성'의 '여론'으로 결집되고 제시될 수 있었던 담론의 폭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한 노선으로 정리되지 않는 『여성신문』의 담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여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그 위치를 공론장 내에서 잡아가고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다.

『여성신문』은 여성 정론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동안 방대한 분량이 누적되었으나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다. 유선영[10]은 중앙일간지의 여성지면이나 여성 언론인의 위상이 아닌 여성 대안언론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짚으며, 여성 대안언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논한 바 있다. 여성 대안언론에 대한 내용분석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태에서 유선영은 중앙일간지와 『여성신문』의 여성 보도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며 연구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중앙일간지의 보도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하에 『여성신문』을 비교군으로 살폈기에 『여성신문』 자체에 연구의 초점이 있지는 않았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5월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었기에 『여성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징이 깊이 고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어진 황금희[11]의 연구는 여성 대안언론의 특성과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황금희는 2002년까지 발행된 『여성신문』과 『이프』의 지면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여성주의 매체'[12]의 전반적 특징과 정

8 『민족공동체 회복을 촉구한다-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 『여성신문』 0호, 1988. 10. 28., 3쪽.

9 황금희, 앞의 글, 34-35, 68-71쪽.

10 유선영, 앞의 글.

11 황금희, 앞의 글.

12 황금희의 연구에서 여성주의 매체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의미화와 지식의 재소유, 그리

치학, 딜레마 등을 논했다. 이로써 '여성주의 매체'로서 『여성신문』의 특성을 조망했으나, 한편으로는 각 시기 공론장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성신문』의 담론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공론장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성신문』에 선택, 배치된 담론을 분석할 때, 그것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지녔는가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은 공론장이나 시민사회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구성되었고, 여성 언론의 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면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런 만큼, 장기간의 전반적 특징을 도출하는 것으로는 규명될 수 없는 세부적인 역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함의를 논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 내지 '불명확한 정치적 입장' 등으로 정리되어온 『여성신문』의 담론을 세부화하고, 그것이 '여성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것의 함의를 공론장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이 글은 1980년대 말이라는 특정한 국면에서 『여성신문』의 담론 구성을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여성신문』의 창간 이후 1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여성 언론'의 창간이라는 점이 주목을 모은 때였다. '여성 언론'의 기획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실험하며 구체화해간 기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여 들여다볼 만하다.

1980년대 말은 언론·출판 자유화의 상황에서 규제의 방식이 전환되고 있었던 시기라는 점에서도 면밀한 고찰을 요한다. 검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출판물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불온서적과 외설출판물이 범람하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정신을 병들게 한다는 우려가 보수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도 있었다.[13] 국가 차원에서 검열이 폐지, 축소되고 성표현물이 범람하는 상황은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개입의 공간이 커지는 정치적, 사회적인 기회구조이기

고 세상을 보는 진보적인 새로운 방식을 갖는 매체"로 규정된다. 그 문화정치학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여성주의 매체는 여성들이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방식으로 공론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2) 여성주의 매체는 조직 내에서부터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주의를 실천한다. (3) 여성주의 매체는 여성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로 부각하며 여성들 간의 소통을 유도한다.(황금희, 앞의 글, 24-26쪽.)

13 1980년대 후반의 상황은 이봉범,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집, 구보학회, 2018, 189-192쪽.

도 했다.[14] 이렇듯 성표현물의 관리가 사회문제로 구성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 변화한 국면으로서 1987년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놓인다.[15]

특정한 현상이 사회문제로 구성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며, 특히 시민사회와 미디어의 공적 담론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16] 1980년대 말은 이러한 각축 속에서 건전한 성 풍속에 반하는 대상의 경계가 움직인 시기였던바, 이는 곧 시민들의 올바른 행동 규범을 정하고 교육하는 통치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17] 특히 대안언론은 기존 언론과는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생산하며, 독자들에게 가치 규정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특징적인 매체이다.[18] 따라서 공론장에서 어떤 담론들이 경합하며 규범의 재구성 과정에 개입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할 때, 이 시기 형성되고 있던 대안언론의 담론을 살피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신문』을 이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 연구는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상의 시각에 따라 본 연구는 1980년대 말 『여성신문』의 성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 주주 신문으로 출발하며 '여성 언론'으로 주목을 모았던 『여성신문』의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구성되고 규범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두 연구 이후 『여성신문』에 대한 연구가 멈추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넘어 그 담론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14 김소라, 「1987년 이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구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75쪽. 김소라의 논문에서 사용되는 '성표현물'(sexual materials)은 섹슈얼리티, 육체, 성애 등의 묘사가 포함되는 표현물을 폭넓게 지칭한다.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외설' 또는 '음란'(obscenity)은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는 대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구분에서 '성 표현물'의 개념은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처벌의 모호한 경계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다.(위의 글, 26-27쪽.)

15 위의 글, 4쪽.

16 위의 글, 24-25쪽.

17 위의 글, 3-4쪽.

18 박춘서, 「시민운동과 대안언론-한국적 대안언론 유형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44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0, 217쪽.

고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여성신문』에 대한 분석을 심화할 뿐 아니라, 1980년대 말 공론장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후의 시기를 심층적으로 논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된 분석의 대상은 『여성신문』 지면(0호~55호, 1988. 10. 28.-1989. 12. 29.)이다. 이와 더불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일간지를 보조적으로 함께 살핀다.[19] 『여성신문』이 어떠한 맥락과 사건에 대응하며 성에 관한 논의를 구성했으며 그것이 공론장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1980년대 말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과 이를 둘러싼 담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신문』의 기획에 대한 사실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초기 『여성신문』에 참여한 주체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참고 자료로 삼는다.[20] 이를 통해 1980년대 말 공론장의 과제에 대응하면서 '여성언론'의 위치가 형성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 담론을 지식의 형태로 매개한 『여성신문』의 역할과 그 의미를 논한다.[21]

2 민생치안 의제와 '보호받을 가치'의 조정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매체로서 『여성신문』의 대안적인 성격은 특히 성 범죄 보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된다.[22] 실제로 이는 창간 당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신문』의 한 창간 독자는 9년간의 『여성신문』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여성신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며 다름 아닌 성폭력 관련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

19 주요 일간지 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여 검토했다.

20 초기 『여성신문』의 지면 기획과 배경 맥락, 당시의 상황 등을 보다 정확히 살피기 위해 기자, 객원기자, 편집위원, 편집부장 등 다양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과 총 세 차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과 일시 등의 정보는 인용 시 본문에 주석으로 밝힌다.

21 본고는 성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관련 논의가 '지식'의 이름으로 매개되었다는 점을 분석하면서 '성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성 지식'은 당대에 『여성신문』을 비롯해 언론에서 사용된 표현을 가져온 것이다.

22 황금희, 앞의 글, 47-49쪽.

다른 신문에서 성폭력 관련 기사가 단편적으로 그친 경우가 태반이라면 『여성신문』은 지속적인 추적 기사를 내보냈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다고 말한다.[23] 『여성신문』의 이 같은 보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도 있었으나,[24] 이는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가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신문』의 창간 무렵 성폭력 사건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었으나, 사회면의 단신으로 실리는 정도였다. 창간호 『여성신문』은 이렇듯 신문의 "후미진 구석"에 "조그만 단신기사로 혹은 '휴지통' '색연필'과 같은 눈요기거리와 재미거리"[25]로 실려 온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며, 일명 '안동 주부 사건'[26]에 대한 심층취재 기사를 여러 면에 걸쳐 비중 있게 다루었다.[27] 주간지로 출발한

---

23 박정희경, 「창간독자와 발행인과의 대담」, 『여성신문』, 2005. 5. 1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 2026, 3. 21.

24 박혜란(당시 편집위원)은 『여성신문』이 독자 확보에서 겪은 어려움을 회고하면서 성폭력 문제를 주요하게 이야기했다. 『여성신문』이 처음부터 '여성문제'로 전면화한 것이 성폭력 문제였는데, 그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다. "일부 여성의 문제를 침소봉대"한다고 여기거나, '극성 맞고' '남사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박혜란과의 인터뷰는 2026년 3월 15일 서울시 서초구 인근에서 박혜란의 구술과 김정은·윤조원·임진하·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 창간 1주년 기념호 『여성신문』에는 여러 독자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는 박혜란이 말한 반응들이 여럿 눈에 띈다. "지나치게 여성의 피해사례에 치중한 감"이 있다고 지적하는 "성폭행, 매맞는 아내는 이제 그만!"(양동복)이라는 제목의 의견을 비롯해 "남성문화나 사회인습에 대립적인 자세를 지켜나가기보다는 보다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이론적인 바탕으로" "도덕적 가치관과 올바른 가정문화 보존을 위하여 노력"할 것에 대한 당부(이규현) 등이 있다.(「여성신문에 바란다」, 『여성신문』 51호, 1989. 12. 1.)

25 박효신·박혜숙, 「성폭력 '언론보도' 유감」, 『여성신문』 0호, 1988. 10. 28.

26 '혀 깨문 사건' 등으로도 불렸다. 1988년 2월 26일 새벽 안동에서 피해자가 두 명의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던 중 가해자 한 명의 혀를 깨물어 그의 혀 일부가 절단되었다. 그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피해자의 방어가 정당했는지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27 실제로 창간호의 '안동 주부 사건' 현장취재 기사를 담당했던 박혜숙은 일간지의 가십란이나 휴지통 등에 실린 단신 기사 등을 살피며 『여성신문』에서 본격적으로 취재할 만한 사안들을 발굴했다고 말하며, '안동 주부 사건'을 중요한 사례로 언급한다.(박혜숙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26년 3월 23일 서울시 강남구 인근에서 박혜숙의 구술과 윤조원·임진하·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 발행인 이계경 또한 다른 매체에서 무시하거나 작

만큼, 일간지에 비해 보도의 속도는 늦었으나 그 대신 보다 심층적으로 사건을 취재하는 데서 『여성신문』의 차별성을 구체화한 것이다.[28] 이렇게 보도된 '안동 주부 사건'은 이후 발생한 '대구 다방 여종업원 사건'[29]과 더불어 초기 『여성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30] '사건'을 규정함에 있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여성신문』의 문제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창간호에 실린 편집위

게 다룬 사안들을 거대 이슈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여성신문』의 차별화 전략인 동시에 존재 근거였다고 회고한다.(이계경,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여성신문사, 2007, 106-107쪽.)

28 박효신(당시 편집부장)에 따르면 주간지를 택하는 데 있어 기자 수와 재정 등 현실적인 조건이 작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효선(당시 객원기자)은 취재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취재처에서 일간지와 주간지의 처우가 달랐기 때문인데, 이렇듯 취재처 경쟁과 속보 경쟁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신문의 경쟁력을 고심하면서 기획진단 등 『여성신문』의 각종 심층취재 기사들이 기획되었다고 한다. 김효선은 이러한 기획진단 기사들의 경우 마치 하나의 소논문을 쓰는 일과도 같았다고 말한다.(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2026년 4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인근에서 김효선·박효신·박혜란의 구술과 김정은·윤조원·임진하·정고은·정혜진의 채록으로 2시간가량 진행.)

29 1988년 12월 5일 대구의 다방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귀가 중 경찰관에게 끌려가 두 명의 경찰관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경찰 측에서는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 측의 알리바이 조작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신원 조사, 무고죄 및 간통죄 구속·기소 등이 여성계의 비판을 받았다. 긴 투쟁 속에서 강정순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30 이들 사건의 상징성은 1989년 송년호 『여성신문』의 앞머리에 실린 이경자의 에세이에서도 나타난다. 이경자는 '안동 주부 사건'에 대한 회고로 에세이를 시작하며, 그 사건을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견해"를 여실히 드러냈던 일로 기억한다. 이렇게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에 맞서 일어난 변월수의 이름을 부른 뒤 곧이어 대구 다방 사건의 당사자였던 강정순의 이름을 놓고 있다.(이경자, 「낱낱의 하나에서 어깨동무 우리로」, 『여성신문』 55호, 1989. 12. 29.) 이밖에도 『여성신문』의 성취를 돌아보는 여러 자리에서 이들 사건이 앞머리에 언급된다.(김미량, 「"여성신문 18년은 한국 여성운동 18년의 산역사"」, 『여성신문』, 2006. 10. 20.,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2, 2026. 3. 21.; 이은경, 「초창기 한 획 그은 대표기사들 1」, 『여성신문』, 2007. 11. 30.,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2, 2026. 3. 21.; 여성신문사 20주년 기념사업본부,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 여성신문 뉴스 20年史, 한국 여성 20年史』, 여성신문사, 2008, 20, 24쪽; 여성신문사 편,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여성신문사, 2018, 12-13쪽 등.)

원 장필화의 칼럼이 좋은 예다. 해당 글에서 장필화는 '안동 주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성도덕을 기준으로 보호의 대상을 변별하는 것은 여성을 분리 통치하는 지배의 논리라고 지적했다.[31] 성도덕을 사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정치적인 효과를 짚으며, 언론 보도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같은 호에 실린 현지취재 기사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읽힌다. 기사를 담당한 박효신, 박혜숙은 피해자의 수치와 불명예를 강조하거나 피해자의 평소 사생활 및 행실 문제 등을 거론하는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언론이 여성의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기반할 뿐 아니라 그 관념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32]

'안동 주부 사건' 보도에 대한 『여성신문』의 비판은 뉴스가 흔히 객관성을 표방하지만 기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짚고 있다. 뉴스 제작 과정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이들의 가치 판단과 이데올로기적인 코드, 관행 등이 개입되기에, 뉴스는 사실상 '구성된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33] 뉴스 조직과 제작자들의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건의 특정한 측면이 선택되고 부각될 때 이는 현실에 대한 해석의 틀을 구성하며, 지배 담론에서 소외된 이들의 시각은 계속해서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성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시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들을 일탈자로 비난하는 등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그 예다.[34] '대구 다방 여종업원 사건' 보도는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게 확인된 또 다른 사례였다. 가해자인 경찰관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비롯해 다방 종업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무고 및 간통혐의 구속 등에 대해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졌으나, 이에 대해 언론의 주목이나 관심이 모이지는 않았다. 『여성신문』의 논단 코너에서 이미경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가 다방 종업원이 아닌 "양가집 규수"였다면 언론의 반응은 전혀 달랐으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언론의 반응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성"과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성"[35]의 구분을 드

31 장필화, 「안동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여성신문』 0호, 1988. 10. 27.

32 박효신·박혜숙, 「성폭력 '언론보도' 유감」, 『여성신문』 0호, 1988. 10. 27.

33 황금희, 앞의 글, 27-28쪽.

34 김훈순,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66-72쪽.

러낸다고 지적하며 '보호받을 가치'가 선택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을 문제화했다.

『여성신문』이 무게 있게 다룬 앞의 사건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되, 이들 일간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자체가 적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앞의 사건들은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뉴스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36] 이는 여성의 성이 보호의 대상으로 놓이되,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보여준다.

'폭증'이라고도 표현될 정도로, 1988년부터 이듬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인신매매 문제였다.[37] 상경한 소녀들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범죄 사건 등은 이전에도 보도된 바 있으나, 이토록 대대적으로 화제가 되며 관심을 모으지는 않았다.[38]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방식 또한 특징적이었는데, 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성'으로 여겨진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읽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인신매매 조직이 대거 검거되며 인신매매가 사회문제로 구성되었을 때, 그것은 "무작정 상경"한 농촌 여성 또는 가출 소녀 등 특정 계급에 속하는 여성들의 문제로 이야기되었다.[39] 이와 달리 1980년대 말 언론에서 전면

35 이미경, 「보호받지 못하는 '성'」, 『여성신문』 35호, 1989. 8. 4.

36 뉴스가치란 사건이나 인물, 이슈 등이 뉴스로 인정받을 만한 값어치를 가리키는 단어로, 새로움, 중요도, 시의성 등이 뉴스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이종혁, 「뉴스가치의 개념, 유형, 작동 기제 및 규범에 대한 종합 고찰: '뉴스가치 통합 모형'의 제안」, 『방송문화연구』 31권 1호, KBS 미디어연구소, 2019, 10-11쪽.) 범죄 보도의 경우, '평상적'이거나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큰 뉴스가치를 갖지 못한다.(R. J. Lundman, The News Worthiness and Selection Bias in News About Murder: Comparative and Relative Effects of Novelty and Race and Gender Typifications on Newspaper Coverage of Homicide, *Sociological Forum*, Vol. 18, No. 3, 2003(김훈순, 앞의 글, 67쪽에서 재인용.)) 본론의 사건들이 큰 뉴스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이들의 피해 사실이 새롭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37 구체적인 추이는 박정미,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학논집』 33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48쪽의 일간지 기사 수 그래프를 참조.

38 엄혜진, 「1980년대 후반 '인신매매' 담론을 통해 본 성매매의 의미구성」, 『여/성이론』 14호, 도서출판여이연, 2006, 116-117쪽.

39 「인신매매 17명 검거」, 『경향신문』, 1985. 3. 18. 여성의전화에서 인신매매의 여론화

에 내세워진 것은 백주대로에서 '부녀자', '가정주부', '여중고생' 등이 납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40] 일례로 1988년 12월 『경향신문』에서 추적취재로 비중 있게 실린 기사 제목은 "귀가길 주부·여중생 등 무차별 납치"[41]였다. 기사 본문에 언급되는 치안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구직을 미끼 삼은 인신매매였으나, 기사는 "귀가길"의 "주부"와 "여중생" 등이 "무차별"적으로 납치되고 있다는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웠다. 『한겨레』에서 6회에 걸쳐 이어간 기사에서 편집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딸, 내 누이동생, 내 아내가 사라졌다"[42]라는 문장으로 기획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낮 차량동원 여학생 주부까지 납치"라는 문구가 부제로 내세워졌다.

1980년대 말의 인신매매 담론을 분석한 엄혜진에 따르면, 당시 언론에서 부각되며 인신매매의 공포를 극대화했던 납치의 형태는 실제로는 전체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비중이 작았다.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이 전체적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된다.[43] 이는 앞서 예시로 든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언급되는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에서도 이 같은 실제 비중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삼은 범죄에 그만큼 보도의 가치를 두고 위와 같이 기사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과 '주부' 등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성'을 대표하는 대상이었고, 그만큼 이들이 범죄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일간지의 독자 의견은 언론의 인신매매 담론이 실제로 독자들의 불안

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문제시된 것 역시 구인광고 등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였다.(김희선, 「머리말」,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공개토론회 보고서」, 여성의전화, 1985, 2-3쪽.) 이때 인신매매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여성들이 당하는 문제"(「1. 공개토론회 보고-"인신매매를 고발한다"」,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공개토론회 보고서」, 여성의전화, 1985, 16쪽.)로 구성되었다.

40 박정미, 앞의 글, 48쪽.

41 「귀가길 주부·여중생 등 무차별 납치」, 『경향신문』, 1988. 12. 7.

42 김선주, 「여성 납치·매매 이대로 둘 것인가 〈1〉 향락산업 극성, '매춘범죄' 불러」, 『한겨레』, 1988. 12. 11.

43 엄혜진, 앞의 글, 119쪽.

과 공포를 강력하게 조성했던 것을 확인케 한다. “상경처녀들”을 유혹하는 것을 넘어 “거리와 주택가서 일반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을 등-하교길에서 납치한다니” “언젠가는 이들의 마수가 우리 이웃과 내 가정”, 즉 “평범한 우리네 가정까지 침범”[44]해올 수 있으리라는 목소리가 그 예다. 『여성신문』의 쟁점 코너에서 두레방 교육프로그램 간사 유복림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근래의 여론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요즘에 부쩍 인신매매와 성폭행에 대한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중산층의 부녀자와 여고생에까지 그 범위가 확산된 탓”[45]이라는 것이었다.

『여성신문』의 독자란에도 공포와 불안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전철에서 본 여성의 외양으로부터 성범죄를 연상하고 분노를 느낀 독자의 글이 단적인 예다. 실제로 관찰된 사실은 여성이 다소 흐트러진 외양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뿐이지만, 의견을 보낸 독자는 그로부터 성범죄의 가능성을 확신에 가깝게 떠올린다. 이렇듯 여성의 흐트러진 외양이 곧장 성범죄의 가능성을 연상하게 한 것은 당시 인신매매 사건 등이 부쩍 화제가 된 결과였다.[46] 자신뿐만 아니라 전철 칸의 많은 시선들이 그 여성을 향하였다는 사연자의 회상은 당시 확산되고 있던 인신매매 담론과 더불어 여성의 몸이 피해와 보호의 대상으로 구성되고 있던 상황의 한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여론을 강력하게 일으킨 만큼, 언론의 사건 묘사는 극적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신문』의 한 독자는 근래 신문과 방송 등의 보도가 “소위 ‘당했다’”는 식의 극적인 보도 일변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성의 피해 사실이 자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정작 “어떤 해결책도, 희망도”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만에서 해당 독자는 호신술 교육을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44 박수정, 「부녀자 인신매매 경악스러운 세태」, 『조선일보』, 1988. 12. 11.

45 윤일웅·유복림, 신혜선 정리, 「향락산업의 희생자 여성일 수 없다」, 『여성신문』 33호, 1989. 7. 21.

46 사연자는 전철에서의 감정을 회상한 뒤, “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인신매매나 각종 흉악 사건들을 보면서 불안감과 분노가 교차되고 있던 때”에 우연히 마주친 이 일이 자신에게 강렬하게 남았노라 말한다. 김홍환, 「도처에 널린 성폭행 현장」, 『여성신문』 10호, 1989. 2. 10.

여성의 성이 보호 대상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개인의 자력 보호 정도였던 것이 당시의 상황임을 보여준다.[47] 적어도 『여성신문』의 독자 의견에서는 학교 차원의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밤길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놓여 있었다.[48] 여성들이 최대한 위험에 노출될 상황 자체를 피하고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처방이 주요 일간지에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실리고 있던 상황에서,[49] 이 같은 처방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앞의 독자 의견은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던 불안과 공포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퍼져 나갔다. 『여성신문』은 서울 근교의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이 집단납치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민심의 동향에 주목했다. 소문의 진상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포 심리 자체에 주의를 모으며 이를 민생치안의 문제로 연결했다.[50] 경찰이 시국치안에 집중하는 동안 발생한 민생치안의 공백으로 사태를 풀이한 것이다. 1980년대 말 일간지 사회면 하단을 장식했던 성폭력 기사들을 추려내어 민생치안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경찰의 폭력적인 시국치안의 이면으로 맥락화하기도 했다.[51] 이는 언론에 의해 확산되고 있던 정동을 현실적인 정치의 차원으로 모아내는 것이었다.

전면이 할애된 기획 기사들을 통해 『여성신문』은 현행법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이어갔다. 법이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는 데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회구조에서 배제되는

47 신문에 실리는 전문가의 조언 역시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례로 김세원,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극성」, 『동아일보』, 1988. 12. 15.

48 이경현, 「여학생에게 호신술 교육을」, 『여성신문』 4호, 1988. 12. 23.

49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동아일보』 기사는 "망년회 회식 등 잦은 술자리로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 여성들이 많아 납치 또는 성폭행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진단에 더해,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대개 결단력이 부족하고 허영심이 강하며 정신상태가 해이하고 요란한 옷차림을 한 경우가 많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설명을 범죄의 예방책과 함께 제시했다.(김세원, 앞의 글.)

50 「여성들 납치 공포에 시달려」, 『여성신문』 18호, 1989. 4. 7.

51 「다시 한번 성폭행 근절을 촉구한다」, 『여성신문』 31호, 1989. 7. 7.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52] 여성에게 '술과 남자'를 권하는 것이 죄로 처벌되는 데 비해 남성에게 '술과 여자'를 권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사건'으로 여겨지지조차 않는다는 점을 문제화하기도 했다.[53] 『여성신문』 기사에서 문제로 제기한 이 같은 상황은 해당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에도 서울지검의 검거 소식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88년 12월 17일 서울지검이 강남 일대의 여성 전용 술집들을 급습해 업주 4명과 남성 접대부 38명, 종업원 10명, 여성 손님 21명 등을 연행한 것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10대 후반의 미소년 등 청소년들"이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심야 퇴폐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이들 기사의 첫 문장이었다.[54] 『동아일보』의 경우 수사관이 들이닥친 순간의 사진을 "밀실의 女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실으며, 여성 고객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55] 이들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아울러 제시하며 은밀한 공간을 이용한 여성 고객들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기사에 의하면 이들은 "유한마담, 현지처, 가정부인"과 일부 "여대생"[56]으로 구성되었고, "호스티스나 카페마담뿐 아니라 돈 많은 유한가정주부까지 포함돼 있고 심지어 여대생까지"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성 윤리 타락의 현장을 고발"[57]해주는 증거로 풀이되었다. 『경향신문』 시평에서는 한국 사회의 "말기적 증후군"으로 "인신매매"와 더불어 "여성전용 술집에서 남자 호스티스가 윤락행위를 하고 팁을 받는 게이바"가 나란히 거론되기도 했다. 시평은 "이런 〈울트라 퇴폐〉" 이후에는 "어떤 기발한 해괴망측"[58]이 등장할지 모른다고 말하며 타락상의 극단으로 술집의 여성 고객들을 소환했다.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보도된 여성 전용 호스트바 단속에 대해 여론이 경합

52 배문성, 「넓고 깊게 퍼져 있는 강간」, 『여성신문』 10호, 1989. 2. 10.
53 박효신, 「술 권하는 사회, 여자 권하는 사회」, 『여성신문』 3호, 1988. 12. 16.
54 「남자 접대부 둔 여성술집 적발」, 『동아일보』, 1988. 12. 17.; 「여성전용 퇴폐술집 적발」, 『조선일보』, 1988. 12. 18.
55 「남자 접대부 둔 여성술집 적발」, 『동아일보』, 1988. 12. 17.
56 「남자 접대부 둔 여성술집 적발」, 『동아일보』, 1988. 12. 17.
57 심규선, 「호스티스·여대생도 단골손님」, 『동아일보』, 1988. 12. 17.
58 지용우, 「「퇴폐문화」 이대로 둘 것인가」, 『경향신문』, 1988. 12. 28.

하고 있는 점이다. 일간지 독자란을 살펴보면, 여성 전용 호스트바의 단속이 유독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단속 사실이 선정적으로 보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눈에 띈다.[59] 그 같은 경합의 상황에서 '여성 언론'의 존재감이 확인된다. 앞선 일간지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미소년"들이 부녀자들을 상대로 심야 퇴폐영업을 해왔다고 보도했던[60] 『한겨레』는 후속 보도에서 검찰의 수사 태도와 언론 보도의 선정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전했다. 여기에서 여성신문 객원기자 김효선의 발언이 인용되고 있는데,[61] 이는 주류 언론의 보도 방식을 비판하는 하나의 참조점으로 『여성신문』의 위치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발행된 1988년 송년호 『여성신문』에서는 독자 토론란이 '혼전성관계'라는 주제로 기획되어 눈길을 끈다. 〈청모퉁이 홍모퉁이〉라는 이름으로 꾸려진 해당 코너는 논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닌 두 명의 글을 나란히 실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는 구성이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통해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끔 한 시도"라는 점이 흥미를 유발한 요소였다.[62] 여기에서 『여성신문』은 '혼전성관계'를 주제로 삼아 부부관계 밖의 성관계와 여성의 순결 문제를 화제로 삼았다.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던 시점에 성 규범에 대한 논쟁의 장을 다각도로 마련해간 것이다.

1980년대 말 『여성신문』이 공론화한 사안들은 1주년 기념호에서 자체 연구의 성과로 담겼다. 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여러 면에 걸쳐 분석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성폭행·인신매매·마약 등의 퇴폐적 사회문제의 증가

59 정도영, 「여손님까지 연행 남성 위주 사고다」, 『조선일보』, 1988. 12. 23.; 김현희, 「남성 향락 관대한 사회구조에 비해」, 『조선일보』, 1988. 12. 23.

60 「여성전용 퇴폐술집 7곳 적발」, 『한겨레』, 1988. 12. 18.

61 김효선은 이전의 인신매매 조직 검거 보도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던 언론이 이번에는 여성 고객들의 직업까지 분류하며 발각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기사는 이러한 김효선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이효재, 조영래, 이우정, 한재방, 이계경 등의 견해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다.(「「'여성전용술집 적발」 검찰·언론 싸고 "형평 어긋난 수사·선정적 보도" 비판」, 『한겨레』, 1988. 12. 22.)

62 김보성, 「여성해방이론 고정칼럼 있었으면」, 『여성신문』 51호, 1989. 12. 1.

현상”이 여성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신문』은 이를 “민생치안 부재”의 문제로 표지 헤드라인에서부터 내세우며, “치안부재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했다.[63] 이는 시국치안에 집중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치안의 문제로 성폭행, 인신매매 등을 묶어내고, 현재 정부의 대책들은 민생치안에 대한 충분한 개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성신문』에서 제시된 조사 결과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며[64] ‘여성’들의 현실인식으로 옮겨졌다.

성폭행, 인신매매 등을 민생치안의 문제로 제시하는 방식은 『여성신문』이 인신매매 담론에 개입한 방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1989년 하반기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일지〉 코너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재차 확인된다. 성폭력 사건들이 여타의 사건에 의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마련된 코너라고 밝혀져 있는데,[65] 이렇게 마련된 코너는 ‘강간·인신매매·윤락사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일간지에서 단신으로 다루어지던 강간 사건들을 인신매매, 즉 보다 주목되던 문제와 함께 『여성신문』이라는 지면 안에서 민생치안의 문제로 재구성하며 여론을 모아가고자 한 것이다. 앞서 살폈던바 ‘강간, 윤락사건’ 등에 대한 『여성신문』의 보도가 ‘보호받는 성’과 ‘보호받지 못하는 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이렇듯 ‘강간, 윤락사건’을 ‘인신매매’와 한 범주로 묶어내는 기획은 ‘보호받는 성’과 ‘보호받지 못하는 성’의 분할에 개입해 보호 가

63 「창간 1주년 기념 사회조사·연구보고서-여성의 스트레스,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신문』 51호, 1989. 12. 1. 조사를 책임 진행한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숙자의 글에서도 “우리 사회의 민생치안 부재”는 거듭 심각한 문제로 규정되며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청되었다.(박숙자, 「조사를 마치고-‘발전’ 이전에 쾌적한 사회환경 마련해야」, 『여성신문』 51호, 1989. 12. 1.)

64 「여성, 인신매매 제일 겁낸다」, 『동아일보』, 1989. 11. 27.; 이상문, 「여성 스트레스 성폭행 등 강력범죄 주인(主因)」, 『경향신문』, 1989. 11. 28.; 「민생치안 부재 속 성폭행·인신매매 여성 스트레스 부추겨」, 『한겨레』, 1989. 11. 29. 여성과 관련된 뉴스 소스를 주류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여성신문』이 담당한 주된 역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유선영(2002)의 연구에서 『여성신문』은 소수의 계층이 구독한다는 시장의 한계가 있으나 뉴스 소스의 역할 면에서 주요 일간지들에 참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선영, 앞의 글, 207-208쪽.)

65 「성폭력 사건 일지」, 『여성신문』 41호, 1989. 9. 22.

치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호받는 성'에 속하는 '양가집' 여성들과 그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의 폭력 경험이 '여성' 시각에서의 민생치안 문제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민생치안의 문제가 주요 일간지에 옮겨진 것은 『여성신문』의 전략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새로 규정되는 과정이기도 했던바,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추방의 대상으로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경계가 어디에 그어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성 규범에 대한 비판이 어떠한 형태로 규범을 재구성하고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다.

3 향락문화 추방의 움직임과 규제의 난점

민생치안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1989년 1월 특가법 개정을 통해 최고형량을 상향하는 한편 음란퇴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발표되자 『여성신문』은 비로소 공권력 행사가 예견되었다는 것을 반겼다. 그러나 민생치안이 당연한 행정의 영역이라고 할 때 그것이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 요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의 범죄가 노동쟁의, 파업, 시위, 건물 점거 파괴 등 "보다 정치적 문제들"과 함께 "폭력 파괴 행동"으로 범주화된 것을 아울러 문제 삼으며,[66] 민생치안을 위한 대책이 시국치안과 얽혀 있는 점을 짚었다. 당국에서 본보기식으로 강남 일대의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적발하였으나 현행법상 단속의 한계가 자명함을 현장 취재 기사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근거한 단속이었을뿐더러, 시행령에서 유흥접객부는 '부녀자'만을 지칭하기에 남자 접객부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맹점으로 짚은 것이다.[67] 현재의 행정력상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업소까지 막는 것은 무리라는 당시 단속반 부장검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취재 기자는 "전국적으로 광역화된 퇴폐 성문화의 문제 본질"[68]은 정작

66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인신매매 단속」, 『여성신문』 7호, 1989. 1. 20.
67 배문성, 「여성 전용바 검거 뒤에 남성지배 음모 숨어 있다」, 『여성신문』 7호, 1989. 1. 20.
68 위의 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화된 퇴폐 성문화의 증거는 “호스트바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룸싸롱, 온갖 변태적인 작태를 다보이는 성인 디스코 클럽, 게이바 등의 향락문화가 지천”[69]이라는 데서 찾아졌다. 『여성신문』의 현장취재 기사는 이러한 향락문화야말로 당국에 의해 단속되고 방지되어야 할 퇴폐문화임을 주장했다. 검거 직후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 전용 호스트바의 고객들은 “집안에만 남아 있어야 할 규중마님들”이 아니라 “호스티스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우리 사회 특수 계층, 일부 계층”[70]일 뿐 다수 여성들은 그러한 향락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자체적인 운동이 조직되어갔다. 1989년 3월 YMCA 시민자구운동본부가 향락문화 추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가 퇴폐행위 감시 결의대회를 열었다.[71] 『여성신문』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모든 남녀 시민과 기업, 언론”의 참여를 촉구했다. 일부 개인을 처벌하는 정부의 단속이 민생치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5대 사회악’으로 꼽은 인신매매와 ‘가정파괴범죄’의 온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추방해야 함을 주장했다.[72]

당시 시민사회에서 추방의 대상으로 규정된 ‘향락문화’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외에도 마약, 과소비, 외설 등을 넓게 포함했다.[73] 향락문화로 묶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때 열거된 대상들은 서로 무관한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인신매매 확산과 성 산업의 번성이 왜곡된 성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짐에 따라, 1980년대 말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던 매체의 성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구성되었다. “음란영화와 비디오, 외설출판물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판에 도착적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정상”[74]이라는 진단은 1980년대 말 연일

69 위의 글.

70 위의 글.

71 박혜숙, 「향락산업추방 시민자구운동 본격화 돼」, 『여성신문』 17호, 1989. 3. 31.

72 「향락문화, 우리 손으로 뿌리뽑자」, 『여성신문』 17호, 1989. 3. 31.

73 박정미, 앞의 글, 50쪽.

보도되던 성범죄와 각종 성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분석이었다.[75] 이러한 인식에서 외설은 출판시장이나 대중매체의 저속화 문제로 그칠 수 없었고, 이는 매체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다.

『여성신문』 기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면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76]를 인용했다.[77] 마광수를 겨냥해 출간되었던 이 책의 서문에는 한 여고생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데, 기사는 그 목소리를 직접인용하고 있다. "아직 가치관도 세우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런 책들이 계속해 쏟아져 나온다면 저희들이 가까이 해야 할 책들은 어떤 것일지 두렵기까지 합니다"[78]라는 호소를 인용하며 청소년과 어린이 등의 혼란을 전면화한 것이다.[79]

매체의 교육적인 영향은 향락문화추방운동에서 외설적인 잡지와 소설, 에세이 등 출판물을 '유해'하다고 규정하고 "그런 표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80]라고 주장하는 직접적인 근거였다. 『여성신문』 기사에서 전해지는 잡지윤리세미나에서 이러한 주장은 윤리위의 적극적 고발에 대한 요구로 귀결되었다.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접근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이 그 바탕에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인용하며 『여성신문』 기사는 "공안사건 못지 않은 '자세'로 '보안법'만큼이나 강력한 규제를 조속히 해야할 것"[81]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신문』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전하는 한편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고정 코너로 이어갔다. 여기에서 추방의 대상은 이른바 '음란출판물'만이 아니었다. 순정만화에서 "비정상적인 관계"가 그려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소

74 「병든 사회와 병든 문화와 성범죄」, 『한겨레』, 1989. 7. 2.

75 특히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이러한 논리가 표나게 반복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다.

76 후에 '안동 주부 사건'을 다룬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77 「'야해지는' 대중잡지, 단행본」, 『여성신문』 33호, 1989. 7. 21.

78 오수연, 「왜곡된 성개방, 남성지배 이데올로기 반영」, 『여성신문』 33호, 1989. 7. 21.

79 매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는 방식은 이밖에도 여러 기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꾸려진 기획진단 기사 「건강한 어린이 문화 시급하다」(『여성신문』 25호, 1989. 5. 26.)가 그 예다.

80 오수연, 앞의 글.

81 오숙희, 「음란출판물 어디까지 왔나」, 『여성신문』 35호, 1989. 8. 4.

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때의 ‘비정상적인 관계’란 “동성연애, 출세를 위해 ‘몸을 주는’ 줄거리”[82] 등을 가리켰다. ‘비정상적’이라는 규범의 모호성에 따라 추방의 대상은 포괄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고, 이는 규제의 범위를 논쟁적으로 만들었다. 심의제도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창작자 쪽의 시각에 대해 『여성신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창작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론적으로 강조했으나, 무엇을 어디까지 금지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시 화제가 되었던 마광수의 베스트셀러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의 파장은 이 지점과도 관계되어 있었다. 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이 책은 프로이트 이론을 학문적 주제로 삼아온 마광수라는 인물을 널리 알리며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었다.[83] 그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책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가 출간된 사실 또한 이 책의 파급력을 잘 보여준다. 책의 편저자였던 염재웅은 앞서 언급한 고등학생의 편지를 머리글에 사진으로 실었다. 『여성신문』 기사에도 인용된 이 편지는 선생님에게 학생이 부쳤던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대접받고 있”으며 특히나 “연세대 국문과 교수님이 직접 썼다는”[84] 이야기에 그 책을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는 그 학생은 책의 내용에 가치관의 혼란을 느꼈노라고 고백하며 선생님의 조언을 청하고 있다.

매체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여성신문』은 마광수의 책을 재차 거론했다. 또 하나의 문화와 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비판을 참조하며, 마광수의 인기는 대중의 성적 호기심과 정신적 황폐함을 보여준다는 분석을 옮겼다. 특히 중요하게 거론된 것은 권위자에 대한 대중의 맹신이었다. 『여성신문』은 손덕수의 분석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책의 인기는 “교수라는 직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권위자 맹신주의”와 독자의 정신적 수준 문제 등이 결합된 현상이었다. “교직에 몸을 담은 교수”가 “쾌락지향의 퇴폐적 사고”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

82 오수연, 「순정만화 여성상 왜곡 여전하다」, 『여성신문』 28호, 1989. 6. 16.
83 안건혁, 「“성문제 이젠 자유로이 말할 때”」, 『경향신문』, 1989. 4. 3.
84 염재웅 편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 4판, 시대평론, 1989, 머리글.

은 비판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다.[85] 그러나 '교수'와 '성적 쾌락'이라는 조합의 희소성에 따른 반향은 마광수의 인기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대중 독자들은 "시인이며 대학교수"가, 다른 무엇도 아닌 "성을 소재로"[86] 쓴 이 책을 크게 반겼고, 마광수의 인기는 그 희소한 조합에 대한 독자들의 갈증을 확인하게 했다.[87]

기존의 출판계에서 성에 관한 대중의 지식은 여성잡지나 소위 '불온출판물' 등을 통해 채워졌다.[88] 1980년대 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중의 갈증을 충족시킬 전문가가 매체를 통해 독자와 만나는 접면이 확대되고 있었다. 마광수의 책 역시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 전에 대중잡지에 연재된 글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광수의 에세이 연재 소식을 알리는 호에서 『여원』은 근래 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며 대학가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로 그를 소개하며 "그의 솔직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싣게 되었노라고 밝혔다.[89] 이렇게 실린 마광수의 글은 '마광수 교수가 직접 쓰는 신(新) 사랑학'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되며, '마광수 교수'의 '강의'로 제시되었다.[90] 해당 호에는 부부간의 '성 트러블'에 대한 전문의의 견해와 처방 등이 마광수의 글에 연이어 실려 있는데, 이는 외설화의 경향에 동참한다고 지목된 여성지의 각종 섹스 정보와 글들이 '전문가'의 이름과 더불어 '지식'의 형태로 적극 소개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91]

---

85 박혜숙, 「"성욕에 갇힌 남성의 몸부림"」, 『여성신문』 27호, 1989. 6. 9.

86 위의 글.

87 마광수의 파급력은 교수라는 위치와 결부됨에 따라 또 하나의 문화 토론에서 이상구 박사 신드롬과도 견주어졌다.(「'야한여자'의 해방과 속박」, 『동인회보』 29호, 또 하나의 문화, 1989. 5. 11., 4쪽.) 실제로 마광수의 에세이가 연재되는 동안 『여원』에는 '이상구 박사의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에 대한 조언과 원활한 성생활에 대한 견해가 실리기도 했다.(취재·글 박용재, 「이상구 박사의 사랑의 건강학」, 『여원』 19권 3호, 1989. 3.)

88 김미경, 「'성 공개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레』, 1989. 5. 10.

89 「마광수 교수가 직접 쓰는 마(魔)의 섹스경전-현대판 新 소녀경(素女經)」, 『여원』 18권 12호, 1988. 12., 209쪽. 베스트셀러 1위 소식과 더불어 진행된 『여원』의 인터뷰에서 마광수 자신 또한 책의 화제성을 힘입어 "평생교육이라든가 지식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신을 '교과서'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눈치보잖고 뛰어가서 입을 열 생각"이라 밝혔다.(「윗어른 호통에도 독자와는 찰떡궁합」, 『여원』 19권 3호, 1989. 3., 196쪽.)

90 「마광수 교수가 직접 쓰는 마(魔)의 섹스경전-현대판 新 소녀경(素女經)」, 211쪽.

성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이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소구하는 상황은 담론장에 비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대면하게 했다. 『여성신문』 기사에서 참고되는 또 하나의 문화 소모임의 토론에서 비판적 논의 끝에 대면된 것이 바로 이러한 담론상의 공백이기도 했다. 마광수의 근간이 프로이트라고 할 때, 그 이론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대안이 되는 담론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92]

이러한 상황은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던 성폭력과 청소년들의 성 문제에 의해 보다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성신문』 칼럼에서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 과장 조항원은 현재의 각종 성 문제를 공교육의 실패로 풀이했다. 가정과 학교 어디서도 성 지식을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외설영화, 음란비디오, 주간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결과 각종 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실 부모나 선생들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그는 성교육의 방법은커녕 그것의 의미와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각계에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언론의 관심을 반기지만,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성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대상과 연령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학교 교육의 역할을 강조

---

91 '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신경정신과 의사 정동철의 글을 비롯해, 보건학 박사이자 한의원 원장인 이철호의 섹스 어드바이스와 성(性) 트러블을 고백하는 수기, 성 기능 장애를 분석하는 글 등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 세태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글들은 여원과 한국갤럽이 여성지의 주 독자층으로 상정된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성 의식 조사를 진행한 뒤 기획된 것이었다. 코너에 묶인 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동철, 「1. 전문의의 진단 ● 섹스트러블과 결혼관계의 함수관계-성(性) 트러블은 '이혼에 이르는 병' 아니다」; 「2. 사례별로 본 성(性) 트러블 수기-우리는 지금 이혼으로 가고 있다」; 김현섭, 「3. 현장리포트 ● 성(性) 트러블로 고민하는 내외들-발가벗은 의사소통만이 성(性) 트러블 없앤다」; 「4. 만족한 성생활을 위한 굿 어드바이스-결혼한 여자만이 최고의 섹스를 즐긴다」; 이철호, 「전문가의 어드바이스-아내는 남편 섹스능력의 조련사」.

92 사회를 맡은 김효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의 성문화"를 토론 말미의 화제로 제시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는 쉽지 않았다. 이에 토론자였던 정희준은 "대안을 얘기하자고 하니까 우리들의 말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교수의 주장의 근간이 되는 프로이드 이론에서 성적 쾌락이 강조되는데 우리는 이를 비판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이야기했다. 나아가 "우리 문화풍토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야한여자'의 해방과 속박」, 앞의 글, 6쪽.)

하고 있다.[93]

문제는 부모들만이 아니라 교사들 역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의 성교육이 미흡했던 것은 이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여성신문』은 미혼모 문제를 다루는 기획진단 기사에서 이 점을 짚고 있다. 현재의 부모들이 성에 대한 논의가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성장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담당하기 어려울뿐더러, 대다수 교사들 역시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로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94]

『여성신문』 1호의 독자 상담란에 실린 사연은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들이 겪고 있던 곤경을 잘 보여준다. 사연자는 중학생 아들이 "그런 책"을 본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 "만화는 만화인데, 온통 벌거벗은 남녀들이 엉켜 있는 그림에 말이라곤 신음소리"인 "그런 책"[95]이 '버젓이 출판'되어 아이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데 충격을 표하고 있다. '워낙 순진한' 아이이기에 만화로부터 나쁜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는 "녀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 하겠다"[96]라고 착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거듭 '순진한 아이'라고 강조하지만 기실은 그러한 '아이'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사연자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듯 성적 욕구와 호기심을 지닌 청소년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와 관계 맺어야 하는지는 사연자가 알지 못하는 데 있었다. 『여성신문』에서 전해

93 조항원, 「청소년 성교육을 생각한다」, 『여성신문』 23호, 1989. 5. 12.

94 유근주, 「미혼부 예방이 미혼모 예방이다」, 『여성신문』 45호, 1989. 10. 17. 성적인 도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학교 교육의 현실은 『여성신문』에 첫 연재소설로 실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박완서의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여성신문』, 1989. 2. 17.-1989. 7. 28.)에서도 묘사된다. 소설의 기본 갈등이 혼외 성관계를 사이에 두고 "정상"과 "비정상"의 입장 차이로 서술되는 것을 아울러 눈여겨볼 만하다. 연재 당시 박완서는 소설에서 메시지가 지니는 중요성을 의식하며 『여성신문』의 담론을 재차 살폈노라 이야기했는데,(고정희, 「여성해방문학의 대들보 작가 박완서-"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성신문』 34호, 1989. 7. 28.) 이는 『여성신문』 담론과의 상호관계를 살피게 하는 대목이다.

95 정순자, 「중3짜리가 그런 책을 보다니요」, 『여성신문』 1호, 1988. 12. 2.

96 위의 글.

지는 YWCA 세미나는 이러한 곤경이 흔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만화가게에서 음란비디오를 보고 자위행위가 습관화돼 깊은 죄책감·정서불안에 빠진 예”, “도색잡지를 숨겨두고 보는 예” 등이 여기에서 언급된 문제 상황들이었다. 이렇듯 자녀의 방에서 문제가 되는 물건들을 발견했다면 “경악하거나 찢고 닦달”하지 말고 대화를 유도하라는 조언이 제시되었는데,[97] 이는 당시 많은 부모들이 문제의 출판물들을 발견했을 때 대화 대신 “경악하거나 찢고 닦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저마다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성표현물의 관리에 목소리를 모았을 때 그 중심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이 있었고, 이때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이거나 “성적 존재”라기보다는 “보호받고 계도되어야 할 집단”으로 상정되었다.[98] 그러나 이는 현실의 어린이들이 그만큼 성적인 욕망과 호기심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던 결과였다. 외설포스터에 대한 어린이들의 고민을 전면으로 다룬 『여성신문』의 기획진단 기사는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익명으로 제시하지만, 이어지는 주부의 발언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5학년 아들의 가방에 있는 음란만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돌려봤으면 너덜너덜 걸레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의 상담전화에서 이성과의 성문제를 비롯해 “정상에서 벗어난 성도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와 아울러 전해졌다.[99] ‘어린이다운’ 모습과 괴리되는 것이 현실 속 어린이들이었고, 음란만화의 유행은 이러한 현실 속 어린이들의 욕구와 호기심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당면 과제로 만들었다.

매체가 일종의 성 교본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인식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그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 지식을 얻을 만한 통로가 없는 상황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여성신문』에 소개되는 YMCA 청소년 센터의 발표에서 근래의 각종 성 문제는 “성지식의 부족이나 왜곡된 성관”에서 비롯한다고 분석되었고, 청소년들의 상담 주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성 지식’으로

97 「음란 비디오 청소년에 폐해 막심, 단속 강화해야」, 『여성신문』 6호, 1989. 1. 6.

98 김소라, 앞의 글, 109쪽.

99 「건강한 어린이 문화 시급하다」, 『여성신문』 25호, 1989. 5. 26.

보고되었다.[100] YWCA 주최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임상성학회, 흥사단 청소년상담실, 대한가족협회의 강좌 등에서도 단속체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안방의 비디오문화를 대신할 성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101] "보다 과학적이고 새로운 성도덕의 확립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에서 성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102]라는 문제의식이 형성됨에 따라, 논의는 성 지식에 대한 요청으로 모이고 있었다.

이러한 성 지식의 필요는 자녀들의 훈육 이전에 부모들 자신의 재교육과 변화를 요했다. 한국임상성학회 회장이었던 신경정신과 의사 정동철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래 문제로 부상한 성 문제를 논하며 이 점을 짚었다. 여성들의 성적 불만족과 부부간의 갈등, 성폭력 등의 증가세에 대해 분석하며, 청소년들의 성 문제 역시 이로부터 비롯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본인들은 성인디스코에 가고 음란비디오 필름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만을 주게 됩니다"[103]라고 말하며 그는 부모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성적인 필름들을 접하는 곳이 의외로 자기들의 집이라는 YWCA의 조사를 근거로 들며, 청소년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 자신의 성 문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향락업소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 트러블을 비롯해, 남편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여성의 성욕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104]

앞서 살펴보았던바 향락문화를 소비하는 여성들은 '특수'한 계층이며 대부분 여성들과는 무관하다고 규정되었으나, 과소비와 외설 등을 넓게 포함하며 대중문화와 매체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 향락문화 추방의 흐름 속에서 문제의 대상은 '특수'한 이들로 한정될 수 없었다. 추방되어야 할 향락문화는 다름 아닌 가정 안에서 발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정한 대상들의 추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상황의 대면과 더불어 공론장의 과제는 재구성되고 있었다.

---

100 「성관계 상담 청소년 급증」, 『여성신문』 13호, 1989. 3. 3.

101 「불법 비디오 범람, 청소년 성문제 심각」, 『여성신문』 3호, 1988. 12. 16.; 「음란 비디오 청소년에 폐해 막심, 단속 강화해야」, 『여성신문』 6호, 1989. 1. 6.

102 「불법 비디오 범람, 청소년 성문제 심각」, 『여성신문』 3호, 1988. 12. 16.

103 「'여성의 홧병' 자기실현으로 극복해야」, 『여성신문』 35호, 1989. 8. 4.

104 위의 글.

4 새로운 성 지식의 매개

새로운 성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여성신문』의 독자들은 신문의 역할에 기대를 보였다. 소위 '벗기기 영화'가 판을 치는 세태에 대한 비판[105]을 비롯해 대중매체의 외설화 경향에 대한 비판들이 독자 의견으로 실렸는데, 그 중에서도 신문의 경우 "우리네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점에서 여타의 매체와는 영향력이 다르다고 여겨졌다. 신문은 "그 집 어른부터 아이들까지"[106] 들춰보는 매체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여겨진 것이다. 신문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권장되는 매체라는[107] 독자 의견에서도 신문을 향한 당시 독자들의 기대를 살필 수 있다.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여성신문』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매개하는 여러 코너를 마련했다. 앞서 살폈던 독자 상담란의 사연 옆에 〈어린이 성교실〉이라는 코너가 꾸려진 것이 그 사례이다. 〈어린이 성교실〉은 "아기들도 성적 경험을 갖는다"라는 "전문 연구"를 소개하면서 아이의 성적인 관심이나 행동에 당황하지 말고 접촉을 가르치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독자가 토로했던 고민과도 접속되며 그에 대한 처방과도 같이 읽힌다. 해당 코너는 이후 '성교실'로 이름을 바꾸어 20호까지 이어졌다. 주부로 상정된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두었던 만큼,[108] 주로 자녀 양육 및 부부관계 등과 관련해 성적 욕망이나 행위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이 소개되었다.

첫 순서로 실린 〈'남자가 봉사한다'라는 식은 그릇된 생각〉에서부터 코너의 방향성은 잘 나타난다. "성에 관한 한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조차 갖가지 편견

105 전순옥, 「신문의 영화광고 문제 있다」, 『여성신문』 4호, 1988. 12. 23.

106 정희연, 「'스포츠 정신' 외면하는 스포츠 신문」, 『여성신문』 12호, 1989. 2. 24.

107 위의 글.

108 창간호 권두대담에서 고정희 주간은 신문의 일차적 독자층을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주부층"으로 겨냥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근로직 여성과 대학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이 이들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지영선·고정희, 「한국여성 현실과 언론매체」, 『여성신문』 0호, 1988. 10. 28.)

과 오해로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거나 건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진단하며 "성 전문 연구가"의 지식을 제시하는데, 특히 성기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비과학적인 편견"임을 지적하며 이것이 성관계에서 남성만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여기며 관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논하고 있다.[109] 그 연장선에서 〈성적 욕망 남녀 동등〉은 여성의 성욕에 대한 그간의 인식이 여성 억압의 역사 속에서 구성되었을 뿐이라고 짚으며, 성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성욕이 강하거나 성관계에서 능동적인 여성을 향한 "순결치 못한 여자"라는 낙인을 "전문 연구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정하고 있다.[110] 〈성감대, 오르가즘 다양하다〉에서는 성적 쾌감의 최고단계로서 오르가즘에 대한 오해를 짚는다. 대개 남성 성기의 삽입을 중심으로 오르가즘을 이해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성행동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도 다양하며 여러 신체 부위를 통한 쾌감과 '성적 공상'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1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과 유아 등을 교육하는 데 긴요한 지식으로 제시되었다. 성에 대한 기존 관념은 교육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듭 지적되는데, 예컨대 〈수치심 훈련〉에서는 유아가 성기를 만지거나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규정되며, 이를 자제시키는 부모들의 행동이야말로 수치심을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112] 〈부모방에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에서는 부모가 성행위를 할 때 아이가 방해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대응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목욕 등으로 부모의 벌거벗은 모습에 익숙할 경우 아이들은 체위를 본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것이며, 아이가 소외된다고 느끼거나 부모의 행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서로를 애무하는 애정 표현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도록 권한다.[113]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과 행동에 대한 재규정은 병적이라고 여겨진 성에 대

109 「성교실-'남자가 봉사한다'라는 식은 그릇된 생각」, 『여성신문』 3호, 1988. 12. 16.
110 「성교실-성적 욕망 남녀 동등」, 『여성신문』 4호, 1988. 12. 23.
111 「성교실-성감대, 오르가즘 다양하다」, 『여성신문』 5호, 1988. 12. 30.
112 「성교실-수치심 훈련」, 『여성신문』 8호, 1988. 1. 27.
113 「성교실-부모방에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 『여성신문』 10호, 1989. 2. 10.

한 재인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자위'는 나쁘기만 한가?〉는 청소년들을 병들게 만든다고 여겨지는 자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새로운 논의를 소개한다. 자위는 최근 전문가들에게서 긍정적으로 재인식되어, "성문란의 위험을 막고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들도 양자의 성욕이 균등하지 않으며 상황상 떨어져 지낼 수 있기에 보통의 부부들에게도 자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이야기하며,[114]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부부들의 성도 언제나 규범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논한다. 〈청소년의 성과 부모의 관심〉에서는 아이의 성적인 성숙을 인정하고 성욕이 집안에서 일부라도 실습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15]

대중 독자에게 여성학 지식을 쉬운 형태로 전달하고자 한 〈여성학 강좌〉 코너에서도 성 지식의 소개는 이어졌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성폭행, 인신매매, 추행 외에 이른바 '선남선녀'의 교제 가운데도 강간은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짚고,[116] 성매매나 성폭력 등의 발생 원인으로 '성기 중심 성 문화'를 비판적으로 해부하기도 했다.[117] 한국 사회의 각종 성 문제들에 개입하기 위해 성을 "합리적 사고와 분석의 대상"[118]으로 위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해부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 일탈'로 규정되었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남녀 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과 관행까지를 포함했다. '성 일탈'만이 아니라 성적 능력에 대한 남성의 강박과 부담, 여성의 순결 관념 등이 '성기 중심 성 문화'라는 동일한 문제에서 비롯한 현상들로 묶였다.[119] 이렇게 제시된 지식은 '성 일탈'로 분류된 대상들과

114 「성교실-청소년의 '자위'는 나쁘기만 한가?」, 『여성신문』 17호, 1989. 3. 31.

115 「성교실-청소년의 성과 부모의 관심」, 『여성신문』 19호, 1989. 4. 14. 숲이나 공원 등에서 사랑 없이 충동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 무렵 오르내리던 각종 시민 공원의 성폭력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여성신문』 보도의 사례로 「시민 공원의 성폭력 날로 심각」, 『여성신문』 2호, 1988. 12. 9.을 살필 것.

116 「여성학 강좌-강간문화」, 『여성신문』 44호, 1989. 10. 13.

117 「여성학 강좌-매매춘」, 『여성신문』 45호, 1989. 10. 20.; 「여성학 강좌-성기중심 성문화」, 『여성신문』 53호, 1989. 12. 15.

118 「여성학 강좌-성기중심 성문화」, 『여성신문』 53호, 1989. 12. 15.

구별되어 온 일반적인 성 관행에 대한 관념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여성신문』에서 이 같은 지식들은 기존의 지식과 충돌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현장의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여성신문』의 지면은 구성되었고, 때로는 아직 합의된 설명이 없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견해들이 대화의 형태로 담겼다.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에서 '성의 연구'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들을 『여성신문』이 전면을 할애해 소개한 것[120]은 이러한 대화의 현장을 독자들에게 공유한 것이었다.

연구를 소개하면서 『여성신문』 기사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인신매매 매매춘·성의 상품화" 등을 '여성문제'로 묶어내고 그 뿌리에 있는 한국의 성문화를 "성기 중심의 성문화"[121]로 요약했다. 이는 첫 순서로 게재된 황필호의 연구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분석된 내용이었는데, 『여성신문』은 그 논점을 학술대회의 소개글에서 전면화하고 있다. '성적인 타락'이라는 관념 자체를 해체적으로 접근하는 그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연구에 대한 논평(신옥희)도 나란히 게재하여 '성적인 타락'에 대한 개념 규정을 선명하게 쟁점화했다.

이렇듯 '성적인 타락'을 쟁점화하는 것은 곧 '건전한 성'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학술대회의 '성 연구' 게재가 시작되는 호에서 『여성신문』 사설은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것을 건강한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인신매매, 강간, 아동 성추행 등의 범죄들이 "무규범의 대표적 징후"라고 할 때, 이렇듯 "극단화된 성범죄 또는 성일탈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한 성'의 정립으로 곧장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119 위의 글.

120 총 5회에 걸쳐 요약, 게재된 연구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황필호, 「'성' 연구 1-"여성이 여성을 싫어하는 것은 남성 때문이다"」, 『여성신문』 30호, 1989. 6. 30.; 장필화, 「'성' 연구 2-성의 혁명 없이는 결코 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성신문』 31호, 1989. 7. 7.; 이영자, 「'성' 연구 3-새로운 '성문화 창조'는 인간평등 실현과 직결」, 『여성신문』 32호, 1989. 7. 14.; 심영희, 「'성' 연구 4-성범죄 처벌과정 성차별 뚜렷하다」, 『여성신문』 33호, 1989. 7. 21.; 조순경, 「'성' 연구 5-노동현장 '성폭행'은 여성노동자 통제수단」, 『여성신문』 34호, 1989. 7. 28.

121 「성기중심의 성문화 탈피해야」, 『여성신문』 29호, 1989. 6. 23.

성”이라고 말해지는 “남녀의 성관계”는 과연 ‘건강’한가를 사설의 필자는 이어 질문했다.[122] 일반적 인식에서의 ‘정상적인 성’이 곧 ‘건강한 성’으로 등치될 수 없음을 짚으며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의 ‘건강한 성’이라는 지향점은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을 가로지르며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학계의 논의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며 소개했던『여성신문』지면에는 외국의 운동 현장과 투쟁 소식, 여성학 저서의 출간 소식도 활발히 실렸다.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러한 정보들은 지식의 일환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이성애 부부 중심의 성 관념을 탈피하는 실천의 사례들도 있었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필자가 보내온 〈특별기고〉 글은 서양 여성운동의 메카로 알려진 서베를린의 소식을 전하며 “여성운동이나 레스비안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성희롱과 강간 등이 엄청난 수로 보고된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독일 여성들의 구체적인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동체를 비롯해 여성 상담소, 반포르노단체, 인신매매 대항 단체 등이 여성서점, 여성센터, 여성다방과 음식점, 레즈비언 다방과 음식점, 레즈비언 프로젝트 및 단체 등과 나란히 열거된다.[123]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폭력에 대한 대응과 여성들의 활동이 어떠한 영역으로 펼쳐질 수 있는가를 예시하며, 가능한 행동의 폭을 확장하는 정보들이었다.

대중문화의 동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성애의 재현을 문제로 거론하는 기사가 실렸으나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기고가 실리기도 했던 것은 서로 다른 현장에 속한 이들의 활동과 그들의 시각을 전하고자 했던『여성신문』의 지향에 따른 결과였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성범죄 뉴스로부터 촉발된 향락문화 비판이 어떠한 범위의 논의까지를 생산하고 있었는가를『여성신문』지면은 확인케 한다. ‘건전한 성’의 정립이 그 방향으로 놓여 있었으나, 그 속에는 여러 단체와 학계 등의 시각이 교차하며 긴장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존의 매체에 실린 담론이 때로는『여성신문』의 이슈들과 관계 지어지며

122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촉구한다」,『여성신문』30호, 1989. 6. 30.
123 박재신,「“억울하게 죽어간 여성들의 혼을 달래자”」,『여성신문』20호, 1989. 4. 21.

재배치되기도 했다. 매호 가장 첫 순서로 전면을 할애하여 구성된 〈금주에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가 그 예다. 해당 코너는 여성신문이 아울렀던 시민사회의 이슈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활동과 견해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는 다른 매체에 자주 등장한 유명인사들도 있었다. 이들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신문 측이 때로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들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매개하는 여성 언론의 역할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동철과의 인터뷰가 좋은 예다. 여성의 성적 고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의가 드물었던 상황에서 그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여성 독자들에게 친숙해진 인물이었다. 전문의로서 여성의 성 문제에 관한 진단과 처방을 다양한 지면에 싣기도 했는데, 1988년 여원과 갤럽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의식 조사를 진행한 뒤 '긴급 세태진단' 코너를 꾸렸을 때도 정동철이 필자 중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의의 진단"으로 수록된 정동철의 글은 "성(性) 트러블은 '이혼에 이르는 병'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이는 코너 자체의 방향성과도 부합했다. 당시 설문에는 일상과 관련한 다양한 문항이 있었으나, 긴급 세태진단 코너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결혼한 여자가 최고의 섹스를 즐긴다"[124]라는 문구였다. 정동철의 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불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판적으로 논평하며 부부관계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는 조언이 주를 이룬다. 자신의 면담실에도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성 트러블'에 시달리는 남성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는 "여권운동의 여파가 몰고 온 결과"[125]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여기가 뉴욕인지 파리가 서울인지 알 수 없게 된 현실"[126]임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조사 연구를 참조해 만족스러운 부부생활을 위한 방안을 처방하고도 있다. 그런 그의 글은 다른 '전문가'들의 글과 함께 부부간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배치되었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던 『여성신문』에서 관련

124 「'아내'와 '性'과 '이혼'」, 『여원』 18권 11호, 1988. 11., 212-213쪽.
125 정동철, 앞의 글, 216쪽.
126 위의 글, 같은 쪽.

전문가로 정동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갤럽의 조사는 세태를 진단하는 근거로 재차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정동철은 현재 여성들의 성적 불만족과 그로 인한 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평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부간의 불화는 물론 자녀 교육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정파괴까지" 벌어진다고 논했다. 근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업소, 유흥가, 러브호텔" 등의 증가 역시 원인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127] 이러한 정동철의 진단에 대해 여성신문 측은 실제로 학회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그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 이혼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중년 여성들의 갈등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답변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중년 여성들이 겪는 여성문제에 대해 그가 "성이 갖는 위력"의 "승화"[128]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동철의 아내는 어떠한지 되물으며 대안의 실효성을 질문한 것이다. 아내는 교회 일에 열심이며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의 답변이었으나, 여성신문 측은 여성들의 열성적인 교회 생활이 도피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고 말하며 정동철의 관점을 또 다른 관점과 맞세웠다.

시민자구운동을 이끈 YMCA 이덕승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안에 대한 질문은 반복되었다. 시민자구운동의 이슈로 향락문화가 상정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여성신문 김효선의 질문에 이덕승은 "군사독재와 자본주의 문화의 병폐를 극복하고 대응구조를 찾아나가기 위한 시민주체의 문화운동"이라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김효선은 그가 말하는 '대응구조'가 무엇인지를 되물었다. 향락문화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인데, 이에 이덕승은 그 답변을 찾는 데 난관이 있다고 토로했다. "향락문화를 추방하는 구체적 행동 양식"이란 사실상 "안 가는 것" 외에는 없으며, '안 가는' 대신 "뭘하고 노느냐"에 대해서는 마련된 답이 없다는 것이었다.[129] 향락문화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부

127 「'여성의 홧병' 자기실현으로 극복해야」, 『여성신문』 35호, 1989. 8. 4.
128 위의 글.
129 김효선, 「가정과 함께 하는 사회운동은 없을까요」, 『여성신문』 47호, 1989. 11. 3.

재하는 담론을 짚으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답변을 탐색하고 있는 위의 장면은 『여성신문』이라는 지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비정상적'인 성을 추방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그와 경쟁할 수 있는 성 담론의 생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여성신문』이 매개한 지식은 당대에 어떤 담론까지가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는 여전히 답이 부재했는지를 가시화한다. '건전한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대의 미해결 과제가 이로부터 드러나고 있었던바, 『여성신문』은 '건전한 성'의 정립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구체화할 언어는 뚜렷하지 않았던 1980년대 말 공론장의 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현장과 호흡하며 생산되고 있던 지식과 고민들이 교차하는 장으로서 『여성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자리는 형성되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말 『여성신문』의 성 관련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구성된 과정과 그 속에서 여성 언론이 형성된 방식을 고찰하였다. 특정한 단체나 노선을 중심으로 정리되지 않는 『여성신문』의 담론은 자체의 논조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본고는 『여성신문』이 동시대의 성 담론을 매개하는 장으로서 '여성 언론'의 위치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체의 특성과 의의를 재평가했다. 『여성신문』의 담론을 면밀히 분석하되, 주요 일간지 등의 담론을 견주어 살피면서 1980년대 말 공론장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 언론의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위치를 검토했다. '여성'의 여론이 당대의 사회적 쟁점과 사건에 대응하면서 구성되고 조정되어갔던 과정에 주목하여, '여성'의 여론을 구성하고 공론장에 제시한 '여성 언론'의 기획이 지닌 의미를 조명하였다.

1980년대 말 『여성신문』은 기존의 공론장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구성되어 갔으나, 특정한 노선의 담론을 확립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여성운동 단체와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제출되고 있던 담론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며 『여성신문』 지면 위에서 교차시켰다. 이렇게 구성된 『여성신문』 지면은 1980년대 말 공론장에서 '여성 언론'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었던 담론의 폭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여성신문』의 담론이 이 시기 공론장의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1980년대 말 시민사회에서 결집된 향락문화추방운동의 흐름 속에서 '건전한' 성이 규범화되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공론장에 부재하는 담론을 가시화하며 새로운 성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요청했다. 본고는 이러한 공론장의 요청에 대응하여 다양한 성 지식을 매개한 장으로서 『여성신문』을 위치시키고, 1980년대 말 『여성신문』이라는 공간에서 제시될 수 있었던 담론의 폭과 한계를 아울러 살폈다.

『여성신문』의 독자 목소리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신문은 '안방'까지 들어오는 매체였고, 그 지식은 어른과 아이가 성에 관해 새로 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YWCA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여성신문』의 창간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정기구독을 신청했던 독자가 『여성신문』과 더불어 성장기 딸과 대화할 수 있었으나, 어느 날 딸이 "순결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내적 갈등을 겪으며 『여성신문』을 못 보도록 슬쩍 치워 놓게 되었노라는 고백도 전해진다.[130] 『여성신문』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구성된 문제들은 바로 그런 연유로 여성들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이 마주 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가족이 함께 읽는 매체로서 『여성신문』은 가정 안에서부터 성 규범을 협상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던바, 건전한 성이 무엇인지는 여기에서부터 탐색되어야 하는 과제로 놓여 있었다.

혼전성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쟁점으로 채택해 상반된 견해를 실었던 〈청모퉁이 홍모퉁이〉 코너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그렇듯 충돌하는 관점들을 한 공간에 모으고 대화를 생산할 수 있는 공론장이 긴요했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획한 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논리를 견줄 만한 필자를 섭외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결국 코너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131] 이는 성에 관한 토론을 끌어가기 위한 사회적, 지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론장이 마주하고 있던 과제와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

130 황금희, 앞의 글, 94-95쪽.

131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및 여성신문 창간 37주년 기념 포럼 〈여성신문, 여성해방언론의 다리를 놓다〉(2025. 11. 11.)에서 〈청모퉁이 홍모퉁이〉 코너의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은 배경을 전해 들었다.

1980년대 말 『여성신문』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계승되고 변형되었는가는 또 다른 고찰을 요하는 주제이다. 1980년대 말의 역동적인 상황과 그 속에서 제시된 담론 가운데 무엇이 남겨지고 정치적인 힘으로 조직되었는지,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1990년대의 여성주의 매체 연구를 심화하는 데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룬 시기 이후에 대한 고찰을 요하는 주제로, 이 연구로부터 확장될 수 있는 탐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성신문 소식」 1호, 1988. 8.

『여성신문』 0호~55호, 1988. 10. 28.-1989. 12. 29.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여성신문』, 『여원』.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공개토론회 보고서」, 여성의전화, 1985.

「'야한여자'의 해방과 속박」, 『동인회보』 29호, 또 하나의 문화, 1989. 5. 11.

염재웅 편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 4판, 시대평론, 1989.

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 3. 13.

박혜숙과의 인터뷰, 2026. 3. 25.

김효선·박효신·박혜란과의 인터뷰, 2026. 4. 10.

2. 단행본

유선영, 『여성과 언론: 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중앙일간지와 〈여성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2002, 11~273쪽.

여성신문사 20주년 기념사업본부,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 여성신문 뉴스 20年史, 한국 여성 20年史』, 여성신문사, 2008, 20, 24쪽.

여성신문사 편,『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여성신문사, 2018, 12-13쪽.
이계경,『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여성신문사, 2007, 106-107쪽.

3. 논문

김명혜,「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1, 429-435쪽.
김소라,「1987년 이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구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은규,「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과 추동 요인에 대한 고찰」,『한국언론정보학보』33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87-114쪽.
김훈순,「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한국언론정보학보』27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63-91쪽.
박정미,「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여성학논집』33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6, 31-62쪽.
박춘서,「시민운동과 대안언론-한국적 대안언론 유형의 모색」,『한국언론학보』44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0, 190-221쪽.
엄혜진,「1980년대 후반 '인신매매' 담론을 통해 본 성매매의 의미구성」,『여/성이론』14호, 도서출판여이연, 2006, 110-145쪽.
이봉범,「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구보학보』20집, 구보학회, 2018, 153-210쪽.
이종혁,「뉴스가치의 개념, 유형, 작동 기제 및 규범에 대한 종합 고찰: '뉴스가치 통합 모형'의 제안」,『방송문화연구』31권 1호, KBS 미디어연구소, 2019, 7-45쪽.
황금희,「여성주의 매체의 정치학과 딜레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Abstract

The Formation of "Women's Media" and the Mediation of Sexual Knowledge in the

Late 1980s: An Analysis of The Women's News

Jinha Lim(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women's media" following the liberalization of the press and publishing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discourse on sexuality in The Women's News. Although The Women's News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feminist medium, it has also been criticized for lacking a clearly defined editorial orientation. This study instead redefines the newspaper as a site where discourses from the women's movement, civil society, and academia intersected and were mediated. It further examines how its discourse was constructed and negotiated in response to contemporary social issues, thereby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project of "women's media" within the public sphere of the late 1980s.

In the late 1980s, The Women's News framed sexual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as issues of public security, thereby bringing the norms that determined which forms of sexuality were deemed worthy of protection under critical scrutiny. At the same time, this process contributed to the normalization of "healthy" sexual ethics by defining the pleasure-seeking culture blamed for various sexual problems as something to be eradicated. This study particularly highlights how publications targeted for eradication were themselves circulating as sources of sexual knowledge, making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new discourses on sexuality an important task. By examining The Women's News as a site that brought this task into sharper focus and mediated new discourses on sexuality in the form of knowledge, this study demonstrates its role in the public sphere and assesses both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the discourses it was able to bring together in the late 1980s.

Key words: Women's News, women's media, discourses on sexuality, sexual knowledge, sex education

논문제출 / 2026.07.15.
심사완료 / 2026.08.03.
게재확정 / 2026.08.06.